

한국 CSR의 역사

이상민(한양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발현하여 진화해 오는 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뿌리와 역사로 돌아가 고려와 조선시대의 상인계급들로부터 현대의 재벌 기업인들의 정신에 과연 CSR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 개항기에 이르기까지 상인계급들에게 공유되고 지켜지던 CSR의 정신과 윤리가 존재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민족기업인들이 몰락하였고 오랜 기간 CSR적 요소는 단절되었다. CSR은 이후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 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는 강력한 수단과 정치적 이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추세는 CSR의 미국화이다. 이는 기존의 사업보국과 같은 관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가치중대와 같은 실질적 이윤추구를 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이는 CSR 그 자체가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경영전략에 의해 경쟁적으로 생산되어 거래되는 허구적 상품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주제어: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사, 상인, 재벌

1. 문제제기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국가별로 지칭하는 용어는 각기 다르지만 역사적으로 상인계급이 출현한 이래로 그들이 상행위를 함에 있어 지켜오던 윤리 혹은 정신 등과 같은 암묵지(暗黙知)적 규범이었다. 하지만 이 개념은 현대에 들어와 보다 더 복합적이고 다의(多意)적으로 새롭게 재탄생하여 최근에는 국제적 표준으로까지 수렴되고 있다. CSR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국내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CSR 수행과 이윤증대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과 같은 도구주의적인 방법론과 미시적인 사회공헌 전략을 도출하는 작업에 집중되어 왔다. 이들은 CSR을 서구로부터 수입된 이미 ‘주어진’ 상수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경영학은 물론 사회과학 분야 어디에서도 이 개념의 국내 기원과 역사 그리고 정의에 관한 연구가 부재하였다. 또한 이들은 CSR을 하나의 단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하지만 CSR을 정의하는데 따르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그 주체인 기업이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마다 서로 다른 맥락의 CSR 체제를 발전시켜 오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서구와 한국의 CSR이 왜 다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출발점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사회적 경제와 CSR을 논의하는데 반드시 선행하여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역사적 기원과 뿌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 내용이 밝혀져야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완성되고 다음으로 한 국가에서 기업-사회관계를 이념

형으로 도출하는 이후 단계의 후속작업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의미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실상 ‘(중소기업은 제외된) 재벌그룹 혹은 재벌총수에게 기대하거나 부과된 규범적 의무’ 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가 ‘법인으로서 기업’과 ‘자연인으로서 총수’가 이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특수한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어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CSR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각각 구별하고자 한다. 첫째는 형식적(formal) 의미의 CSR로 이는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틀 내에서 작동하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곡선에 따라 거래가 가능한 허구적 상품(Polanyi, 1968)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기가 호황일 경우 기업들은 잉여이윤을 과시적으로 기부하면서 스스로를 기업시민이라 칭하지만, 불황의 경우 관련 전담부서와 예산이 가장 먼저 없어지거나 삭감된다. 두 번째는 실질적(substantive) 의미로서의 CSR인데 이는 기업(인)과 사회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화된 과정(institutionalized process)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CSR은 보다 광의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의 CSR은 독립운동의 지원일 수도 있으며, 산업화 시기에는 양질의 상품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기도 하며, 경제위기의 경우에는 인력 구조조정을 자제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CSR을 역사적으로 연구할 때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더불어 경험적 CSR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형식적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로서의 CSR, 즉 역사적 과정에 실제 적용되어온 한국-특수적 CSR의 실체를 밝히고 그 진화의 역사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기 CSR의 역사적·사회적 기원 그리고 이후 사회적으로 배태되는(embedded)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CSR의 개념 자체가 원래 우리에게 자생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이었는가에 대해 상인계급이 형성된 전(前)자본주의 시대인 고려,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CSR의 전 역사적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특수적 CSR의 계보와 진화단계를 총체적으로 이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사회관계에 있어 단순히 서구의 개념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에게 최적화된 한국형 CSR 모형을 도출하는데 핵심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i) 역사학과 경영사학 분야에서 고려와 조선 상인에 관한 주요 연구 결과들을 발굴하여 분석하고, ii) 근대 이후의 경우 CSR 관련 신문기사 아카이브의 1차 자료를 분석하고, iii) 여기에 국내 CSR 관련 연구결과를 연결시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2. CSR의 역사적 발달 과정

한국에서 상인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사유재산 제도와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된 고조선시대로 이들은 시장과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던 행상(行商)이었다고 전해진다(조병찬 1992). 이후 상업의 규모가 커지고 체계화된 삼국과 통일신라시대에는 행상과 향시(鄕市), 시전(市廛) 등이 생겨나고 중국과 일본에 대외무역이 성행하였는데 이 시기 왕에게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한다는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상인정신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거상 장보고이다(김성수 2002). 하지만 이 시기의 상인정신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관련 자료의 부족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의 출발점을 고려시대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1) 전(前) 자본주의: 태동기

(1)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시전과 같은 좌상(坐商)이 증가하고 유통경제의 발달로 전업적 상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개경의 시전상인들에게는 더럽게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상인정신이 존재하였다고 한다. 1123년 고려를 다녀간 송나라 서궁(徐兢)의 견문록인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따르면, 개성에는 광화문에서 부민관에 이르는 거리 양쪽에 공랑(公廊) 형식의 점포가 늘어서 있었는데 이 행랑에는 영통(永通), 통상(通商), 광덕(廣德), 흥선(興善), 존신(存信), 행손(行遜) 효의(孝義), 자양(資養)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들 8개의 덕목은 개성상인들이 평상시 지키고 따라야 할 상인정신으로 스스로 자존심을 높이고 삶의 철학으로 삼았다고 한다(고려도경).

구체적으로, 영통은 물자를 영속적으로(永) 유통(通)시킨다는 뜻으로, 생산자와 소비지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필요한 물자를 지속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이 상인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이다. 통상은 외국과 교통(通)하여 서로 상업(商)을 영위하자는 뜻으로, 외국과의 자유로운 교역을 강조한 것으로 중상주의적 사상이 드러난다. 광덕은 덕(德)을 넓혀라(廣)는 뜻으로, 이윤만 좇지 말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널리 덕을 베풀고 쌓으라는 의미이다. 즉 윤리와 도덕으로 사회에 공헌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흥선은 선(善)을 일으키라(興)는 뜻으로, 돈벌이에만 집착하지 말고 번 돈으로 이웃을 위해 적선(積善)도 하라는 의미이다. 즉 사회적 책임도 다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존신은 신용(信)이 존재(存)해야 한다는 뜻으로, 장사를 할 때 신용을 중시하고 신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행손은 공손(遜)하게 행동(行)하라는 뜻으로, 장사를 할 때 고객에게 항상 공손하고 겸

손하자는 의미로 현대적 개념에서 지칭하는 고객중심의 경영이념이다. 효의는 효(孝)를 실천하고 의(義)롭게 살아가라는 뜻으로, 장사로 인해 자칫 놓치기 쉬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형제자매 등과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상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자양은 재물(資)로 봉양(養)한다는 뜻으로, 장사로 번 돈으로 재물을 구해 어려운 사람들을 봉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사회봉사 활동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김병하 1994; 정승모 2006).

이렇듯 고려시대에는 상인들의 사명과 경영이념, 사회적 책임 개념 등이 뚜렷하게 존재하였다. 이들은 상인으로서 상도덕을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검소하게 생활하며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그들만의 윤리가 있었던 것이다. 이들 중 특히 광덕(廣德)과 흥선(興善) 그리고 자양(資養)의 세 가지 덕목은 현대적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한국 CSR의 기원’이라고 칭할 수 있겠다.

(2)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유교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가 사회의 지도 원리가 되고 상업은 비생산적이라 하여 농업보다 천시되었다. 따라서 상인은 천대를 받았고 양반과 관리들의 가림주구와 약탈을 상인들끼리 협동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자력구제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상인정신이 대두되게 되는데, 이는 근면검소와 합리적 행동, 그리고 상호부조의 정신이다. 이 시기 상인들 중에서 이러한 상인정신을 가장 잘 실천한 이들은 전국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보부상이었다. 이 보부상의 중심이 조선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일명 송상(松商)으로 불린 개성상인이었다(고승희 2005).

개성상인의 유래는 조선의 건국 당시 두문동 72현으로 잘 알려진

고려 유신들로 이들은 이씨조선에 저항하며 벼슬을 거부하였고 생존 수단으로 당시 사농공상의 신분질서 중 가장 아래인 상업을 택하였다. 개성 사대부들의 후예들은 이후 조선시대 내내 벼슬길이 막혔기 때문에 학문을 버리고 상업적 농업이나 전국 방방곡곡으로 행상을 하는 보부상이 되었다. 성종 이후 공식적으로 개성인의 과거 응시 금지제도가 풀렸으나 실제로는 중앙의 관직에 출사하는 것이 봉쇄되어 있었다(양상현 2002). 하지만 이들은 뿌리가 사대부 출신의 상류층으로서 지식을 갖춘 높은 수준의 상인이었기 때문에 상술이 뛰어났고 다른 상인집단들과 구별되는 창의적 특성을 보여주었다(강만길 1973). 이들은 상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선비의 정신을 간직한 채 상술을 익힌다”는 사훈상재(士魂商才)의 정신을 발휘하였는데(한만호 2004, 36), 대표적인 사례가 개성상인들은 지식이 탁월하여 이탈리아의 복식부기 발명보다 200년이나 앞서서 송도사개치부법(松都四介治簿法)이라는 수입, 지출, 이익, 소비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계산하는 독특한 부기법을 고안하여 사용한 것이다. 또한 인삼무역에 있어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연산인 산삼을 판매만하는 게 아니라 인삼을 직접 재배, 경작한 뒤 홍삼으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유리한 조건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김병하 외 1992).

개성상인들이 전국에 설치한 점포를 송방(松房)이라 했는데 이곳에는 조선시대 이들의 상인정신을 집약한 의(義), 신(信), 실(實)이라는 삼도훈(三道訓)과 오행(五行), 즉 족(足), 구(口), 친(親), 신(信), 상(商)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의는 함께 일하는 사람과 친화하고, 동업자와는 의롭게 지내면서 의리(義)를 지키라는 뜻이다. 신은 고객에게 항상 믿음(信)을 주면서 장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은 현실 속에서 부딪치는 장사를 하되 어떠한 명분보다 실리(實利)를 추구하라는 뜻이다. 오행은 삼도훈의 구체적인 행동원칙인데, 족이란 열심히 밭(足)품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는 뜻이고, 구란 사람을 만나면 많은 대화(口)를 나누라는 뜻이다. 친이란 그래서 사람들과 친(親)해지도록 하라는 뜻이며, 신이란 사람들과 친해지면 외상을 주더라도 믿음(信)을 얻도록 하라는 뜻이며, 마지막으로 상이란 믿음을 얻었으면 그 때가서 장사(商)를 하라는 뜻이다(고승희 2005; 임외석 2014). 또한 전국을 돌아다니는 행상인 보부상들에게도 행실의 도덕적 기틀로 망언을 일삼지 않고(勿妄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며(勿悖行), 음란하지 않고(勿淫亂), 도적질 하지 않는다(物盜賊)는 4가지의 계명과 도덕준수의무, 정조준수의무, 예의준수의무, 규율엄수의무, 환난준수의무, 경비납부의무 등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의무사항이 있었다(최상문-김학열 2008).

조선후기의 개성상인은 상인정신을 본격적인 경영이념으로 변화시켰다. 17세기 후반 이후 조선사회는 대동법(大同法) 시행으로 생산력의 발달과 상업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1678년 상평통보와 같은 화폐가 전면적으로 유통됨으로써 자본의 축적이 가속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개성상인은 시전과 같은 특권상인과 경쟁하면서 부상대고(富商大賈) 즉, 많은 밀천을 가지고 대규모로 장사를 하는 주류 상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개성상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보부상단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이들의 단결력이 커짐에 따라 조선 정부는 비상시의 통신과 물자운반 등의 도움을 받으려 했고, 보부상단은 정경 유착하여 상거래의 안정과 이윤획득을 보장받으려 하였다(고승희 2005). 조선후기에 이르러 상업이 발달하고 경쟁이 격심해짐에 따라 상권의 확대와 유지를 위해 투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상인들의 단결과 협동은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즉, 조선후기의 송상정신은 단결력과 협동심으로 승화되어 나타났다(최상문-김학열 2008). 개성상인들은 특히 동료 간의 단결심과 협동심을 바탕으로 하는 상인정신을 발달시켰는데 이는 시전상인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전대특권의

유지를 위해 공동으로 투쟁해야 했기에 업종별로 배타적인 동업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김성수 2002).

개성상인들은 이타적인 신념을 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것을 죄악시 하고 사회적 책임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윤리관은 수신제가평천하라는 유교로부터의 영향으로 기인하였는데 근면과 검약, 공경, 용서 등과 관례와 혼례, 상례, 제례를 철저히 지키는 의식이 타지방의 상인들과 뚜렷하게 구별되었다(황선민 1994). 이러한 상인정신이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18세기 실학파의 상업진흥론과 경영혁신론, 부국이민(富國利民)의 경제철학 등이 생성되었고 여기에 더불어 송도사개치부법의 사용과 같이 글과 셈을 할 줄 아는 식자층의 계산적 상인이 많았던 것에 있었다. 예를 들어 이 시기 박지원의 ‘허생전’이 실린 열하일기 중 옥갑야화(玉匣夜話)에 나타나는 허생과 변승업의 재산의 사회 환원 지향적 사상은 현대의 CSR적 요소를 담고 있다.¹⁾

조선후기 개성상인들은 상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려는 근대 자본주의적 시도를 하였다. 대규모 상인인 사상도고(私商都賈)로서 송방은 전국의 상권을 장악하여 매점, 매석의 도고상업(都賈商業)을 통하여 상업자본을 축적하였다. 이들은 축적한 상업자본을 기초로 농업 생산자나 군소 수공업 생산자들에 대한 선대(先貸)자본을 투자하는 선대제적 지배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당시 수출상품의 핵심인 인삼, 피혁, 종이를 확보하고 송방을 통한 유통망을 배경으로 생산자에게 직접 대금을 미리 지불하여 물품을 매점하는 상술을 이용하였다(이훈섭 1992). 많은 자본을 축적한 개성상인들은 광산개발 분야 등 상업 이외

¹⁾ 변승업이 중병에 걸리자, 자식들이 돈을 빌려준 장부를 가지고 왔다. 정리해 보니 은으로 50만 냥이었다. 자식들이 돈의 출납도 번거롭고 또 떼일 수도 있다면서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자고 하자, 변승업은 화를 내며 “이 돈은 서울 만호(萬戶)의 명줄이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어버린단 말이나?” 하고 거두어들이지 말고 자기 재산을 흠어 버린다(열하일기 중 옥갑야화).

의 부문에 자본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개성상인들의 이러한 상업자본의 생산자본에 대한 직접투자는 이윤을 획득하는 수준이 단순히 시세차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을 장악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산업자본의 축적을 도모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양상현 2002).

(3) 개항기

조선후기 도고상업의 전개를 통해 축적된 개성상인의 상업자본이 생산 부문에 재투입되면서 산업자본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렇게 축적된 자본은 이후 조선 최대의 토착 민간자본으로 성장하였고 개항 이후 외국자본의 침입에 대항하는 강력한 민간자본의 대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상징성 때문에 이후 개성상인은 외국자본에 의해 철저히 봉쇄당하게 되고 인삼 수출권마저 잃게 되어 시장의 독점지배가 소멸됨으로써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승희 2005).

개항기(1876년-1910년)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육의전 상인, 시전상인, 공인, 객주, 보부상 등의 재래상인층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변화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부터 촉발되었는데, 이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의 격화, 그리고 뒤이어 오랜 기간 동안 독과점으로 향유해오던 기득권의 상실이었다. 가장 먼저 1876년 2월 한일수호조약이 체결된 후 부산이 개항되자 일본의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고 사설인 제일은행을 설립되었다. 이후 미국, 청,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과 차례로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원산과 인천도 개항되고 1883년에는 한성이 외국상인에게 개시되어 조선의 주요 항구는 차례로 외국상인에게 개방되었고 다수의 외국상인들이 서구의 공장제 상품을 갖고 등장하였다. 특히 인천항에는 독일계 세창양행, 영국계 태화양행, 미국계 운산양행 등의 서구상사들이 잇따라 진출하였다(민

운 2007). 이렇듯 조선의 재래상인들은 개항 이후 외국상인들과 치열한 경쟁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으로 육의전과 공인상인 등의 특권제도가 폐지되고 영업의 자유가 실현되었다. 더불어 개성상인과 경강상인(京江商人)과 같이 강한 조직력과 거대한 자금력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던 사상인(私商人) 조직인 사상도고 역시 혁파되었다. 이는 기존의 공상인과 사상인 모두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되었고 해외정보에 어두웠던 조선의 상인들은 기존의 상권을 잃고 그 자리를 일본과 청나라의 상인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특히 개항장을 장악하고 있던 서울의 경강상인들의 경우 근대적인 기선을 앞세워 은행자본의 지원을 받아 조선에 진출한 외국자본에 대항하기에 역부족이었기에 대부분 외국 상업자본에 종속되어 갔다(양상현 2002).

이러한 큰 변혁들은 새로운 자본주의 근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1883년 11월 20일자 한성순보에는 ‘회사설(會社說)’이 게재되어 근대적인 서구식 주식회사의 설립을 권장하였다. 이후 서구식 회사조직과 상인조합의 결성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설립된 회사는 대부분이 상사회사였다. 또한 상인들의 협동조직체인 상업회의소가 서울, 인천, 부산, 목포 등지에서 결성되었고 보부상들은 전국적 조직인 상무사(商務社)를 결성하였다. 1884년 4월 9일자 한성순보 제15호 국내회사란에 따르면 당시 서울, 인천, 부산에 설립된 민족상사회사는 28개에 달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설립된 회사들은 근대적인 법인격을 갖는 회사라기보다는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인 것이 많았고, 정부의 특권을 부여받는 특권단체적인 성격이 강하다보니 장기간 존속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다. 이렇듯 기존의 공상인과 사상인 모두가 힘을 잃은 상황에서 맞이하게 된 자본주의의 근대화는 외형적으로만 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 단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이라는 초보적 학습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자본주의 제도에 조선사회가 적응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김재호 2014).

2) 일제 강점기: 단절기

1910년 한일합방으로 조선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체제로 전락하였다. 이는 이전 개항기 기간에 싹을 틔우던 조선 상인들의 근대화 욕구가 말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제는 1910년 12월 28일 조선회사령을 공포하였는데 이의 내용은 조선에서의 회사 설립 및 조선 외에 설립된 회사가 조선에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회사 설립의 허가주의로, 조선에서의 민족적인 근대 회사 설립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1914년 시장규칙의 제정, 서울 장안의 유기전 폐쇄, 개성인삼의 자유판매 금지, 토지조사사업 시작 등 민족상인과 민족자본의 말살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제의 말살정책에 반발하여 조선상인과 자본의 저항적 민족주의 특성이 잉태되는데, 1919년 3.1운동을 시발점으로 일제불매운동과 1922년 조만식을 중심으로 조선물산장려운동, 민족기업 육성운동 등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1920년 일제가 일본자본의 조선 내 진입을 쉽게하기 위해 회사령을 폐지하고 회사설립을 신고제로 바꾸는 과정을 틈타 다수의 민족계 자본 회사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는 기업가를 친일형, 매관형, 민족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김성수 1985), 실재에 있어서 극소수를 제외하면 일제 식민지라는 특수한 시대상황 속에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 시기 민족형 기업가들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우리 민족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국산품을 공급하며, 육영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가정신을 보여주었다.

언론 역시 민족주의적인 경제이념 성향이 강하였는데, 특히 일본인 소유 기업에서 발발하는 노사문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의 잣대로 한국인 노동자의 편을 드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실례로 1925년 2월 13일 동아일보는 경성전기주식회사 소속 전차 승무원 5백여 명이 임금 인상 및 8시간 노동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돌입한 총파업과 관련하여 회사당국이 무성의로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강하게 비판하는 사설을 실고 있다. 이 회사는 이토 히로부미에 이어 제2대 한국 통감을 역임한 소네 아라스케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사설의 주된 요지는 현대자본주의에서 기업이 개인의 영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30만 경성시민의 교통안전과 같은 사회공익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 회사가 전적으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기술하고 있다(동아일보 1925.2.13). 한성 일원의 전기, 전차, 가스 사업을 독점했던 경성전기에서는 이후에도 노동자 파업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해방 당시 5000명 직원을 가진 이 회사는 철도 부문에 이어 조선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사업장으로 일제 강점기와 해방 전후 시기 한국 노동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 된다.

일제 강점기의 강압정책에 대한 반발은 우리 기업인들의 정신과 문화에 민족주의가 뿌리 깊게 배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이전 시기인 조선후기와 개항기에 개성상인인 보부상들이 가지고 있던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정신으로부터 기인하였다. 보부상은 행상이면서도 유사시에 충성을 다하고 정의를 위한 분발심으로 군진에 뛰어들어 활약하였다. 그들은 충의(忠義)라는 두 글자를 항상 부표로 만들어 몸에 간직하고 다녔고 평시에는 의리를 바탕으로 상업활동에 종사하고 국

난이 일어나면 국가에 충성하였다. 이러한 개성상인의 진충보국 정신은 이후 애국애족의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정신으로 계승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상업문화의 산물이다. 즉, 정직과 신용 및 근검절약을 근간으로 상부상조적인 협동과 강인한 단결정신이라는 전통적인 개성상인의 상도에 이제 민족애와 애국정신이 융화된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사업의 흥망은 곧바로 국가와 민족의 흥망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이훈섭 1992; 홍하상 2004).

진충보국 정신을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 하의 민족기업인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하였다. 하나는 학교설립과 장학금 지급과 같이 육영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자금 공급과 같이 독립운동에 재산을 희사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이들은 이승훈, 안희제, 김원근 형제, 유일한 등과 같은 민족주의 정신이 투철한 기업가들로 이들은 공통적으로 축적한 부를 사회에 육영사업과 독립운동의 방식으로 환원하였다. 또한 개성인삼의 판매권 몰수로 큰 타격을 받은 개성상인들 역시 기존의 전국 보부상단을 중심으로 애국애족정신을 바탕으로 상해임시정부와 독립군의 군자금 모금 및 운송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독립운동 자금의 지원은 그 성격상 비공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제에 의해 적발되어 공개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이상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지만, 당시 신문기사들을 보면 민족기업인들에게 이는 일종의 묵시적 규범과 같이 작용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육영사업에 참여하는 일은 독립운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공개적이었다. 1930년대 후반 들어 일부 민족기업가들에 의해 정직하게 돈을 벌어 고통 받는 민족의 앞날에 등불을 켜겠다는 취지하에 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한 민간 육영재단 설립이 시작되었다. 국내

재단법인의 효시는 1939년 삼양사 창업주인 김연수에 의해 설립된 양영회(養英會)이다. 김연수는 1939년 6월 사재 34만원을 출연,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삼양사 2012). 더불어 양영회가 출범한지 2개월 뒤인 1939년 8월 (주)경방의 창업주인 김용완이 삼양동제회(三養同濟會)를 설립하였다(경방 2012).

친일형 혹은 매판형 기업인들은 일제의 비호 아래 상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었다. 반면, 독립운동과 육영사업에 적극 참여한 민족기업인들의 경우 상업자본을 민족적 대의를 위해 사용하였고 이는 결국 상업자본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고갈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족기업인들이 본격적인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에 실패하고 몰락하게 되고 이중 아모레퍼시픽과 신도리코 같이 일부 살아남은 개성상인의 후예들만이 전통적인 상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자본주의적 특성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이념적으로 기업인에게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이 융합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이념의 실천에 충실하였던 대부분의 민족기업들은 보유한 상업자본이 대의적 소비로 고갈되어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후 발발한 한국전쟁과 맞물린 극도의 혼란 속에서 성숙한 현대자본주의의 정신으로 계승, 발전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새롭게 등장한 신흥 재벌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 역시 이와 유사한 경로를 따르게 된다.

3) 초(初) 자본주의: 방관적 CSR

(1) 해방 후

1945년 해방 이후 정치, 사회적 혼란과 연이어 발발한 1950년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그나마 일부 남아있던 민족기업인들의 재산이 고갈되고 경제적 터전이 폐허로 변화되고 말았다. 이러한 혼란 속에 상당 기간 밀수품의 범람으로 상거래 질서가 땅에 떨어졌다. 아울러 해방 이후와 한국전쟁 중에 진행된 토지개혁을 통하여 전통적인 지주계급이 소멸되고 신흥 자본가계층이 출현하였다. 특히 1950년대 전후 복구와 경제부흥 계획에 따라 새로운 대기업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귀속사업체 및 국유재산 불하, 원조물자 및 자금의 불하와 환차익, 산업은행의 특혜용자와 금리차익 등과 같은 각종 특혜를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이 당시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란 단순히 명망 있는 지역 유지의 육영, 장학사업을 의미하던 시기였다. 당시 재주는 있지만 집안 형편 상 진학하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중등학교 이상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많은 소규모 육영장학단체들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정적 배경도 존재하였다. 실례로 1957년 현재 문교부에 등록된 이러한 단체들이 100여개가 넘었는데 이들이 모두 육영, 장학만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종교유지(維持), 계몽교화, 문묘유지, 문화선전 등의 명목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개인 또는 유지가 재산을 기부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은 세금을 면제해주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육영, 장학사업과는 거리가 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단체가 많이 존재하였다. 즉, 해방 전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해방 후 농민들에게 싼 가격에 분배되는 것을 피하려 그것을 재단법인으로 옮겨서 계속 보유하려는 얽은피로 만들어진 허울뿐인 단체들

이 난립하였다(동아일보 1957.4.1). 이는 현대적 의미에 있어 한국의 CSR이 사회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비등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해방 후 상당기간 동안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의 미성숙과 시장기구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본을 축적하는 데도 파행성을 띄게 되었다. 이 시기 기업들은 기업가 정신이 희박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같은 특혜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하려 하지 않는 태성에 젖어 있었고 주요 관심은 외자도입 사업에 적격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 받는데 있었다(경향신문 1962.1.25). 따라서 이 시기 기업인들에게는 사회적 책임 개념 자체가 없는 방관의 단계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신흥 기업인들에게 민족주의나 애국주의 같은 정치적 이념 역시 중요하지 않았다.

(2) 1960년대

이렇듯 원조경제와 정부의 특혜를 중심으로 한 정경유착이 가장 큰 산업자본 축적의 계기가 됨에 따라 기업과 기업인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부정적 이미지로 점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터져 나온 기업 불상사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거치면서 재벌은 부정축재자의 대명사로 불리었고 1964년 6.3사태에는 “악질 재벌 잡아먹자”라는 구호까지 등장하였다. 이에 대해 기업인들은 1961년 8월 이병철 삼성 회장을 초대회장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전신인 한국경제인협회를 발족하여 집단적 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동아일보 1965.2.6). 흥미로운 점은 아직 대규모의 재벌 기업군이 형성되기 이전인 1960년대 초반까지는 언론 지상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드물었다는 사실이다. 하

지만 1964년 1월 삼분폭리사건(三粉暴利事件)이 발발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가 국내 언론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특히 한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이 사회적으로 배태되는 기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후 <기업 불상사 → 반성과 자숙 → 휴지기 → 기업 불상사>라는 이른바 ‘CSR의 쳇바퀴’라는 기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삼분폭리사건은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세 가지 주요 생활 물자인 설탕, 밀가루, 시멘트를 생산하는 재벌 기업들이 가격조작과 세금포탈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한 사건이다. 외국에서 들여온 밀가루 원맥을 배정받은 10여개 제분업체들은 원맥을 가공해 출고하면서 고시가격의 3배까지 올려 받아 1백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고, 독점이 형성되었던 설탕과 시멘트 업계 역시 고시가의 3-4배의 가격조작과 세금 포탈로 막대한 폭리를 누렸다. 이 사건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당시 가장 중요한 경제현안이었던 만큼 국민의 원성이 집중되었는데 언론에 “악덕기업가”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삼분폭리에 치솟는 민성(民聲)” “기업인들은 자기 자세를 자성하라” 등과 같은 기사들이 지면을 차지하였다. 이 당시 한 신문사의 사설을 보면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신기업군들의 행정을 더듬어 볼 때 과연 그들은 자기의 사회적 책임을 깨닫고 있는지 또는 민족적 사명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털끝만큼이라도 해왔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음은 유감이다”라며 강한 재벌 기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경향신문 1964.2.18). 특히 설탕의 경우 당시 국내 제당업자가 둘뿐이었고, 이 중 삼성의 제일제당이 약 60%를 점하고 있던 현실을 감안할 때 삼성이 그 중심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1964년 국회에 보고된 삼분폭리사건에 대한 정부의 국정감사 보고서는 1963년 상반기에 삼분제조업자에 대한 세무사찰을 실시한 결과 제일제당 외 17개사에 대해 추징세액 3,880만원, 벌과금 390만원

을 부과했다고 기술하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 사건 이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공익재단 설립으로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는데 1965년 2월 4일 자신의 55세 생일에 자신의 재산 10억원을 출연하여 삼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육영과 문화 사업에 힘쓰겠다고 발표한다. 이 당시 10억원이라는 액수는 일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컸기에 일시적이지만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었다(동아일보 1965.2.6). 한편 정부도 이 사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개념은 당시 정부에게 기업을 ‘지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1964년 6월 29일 박충훈 상공부장관은 삼분제품과 같이 재벌기업의 독과점 상품들의 가격을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표한다(동아일보 1964.6.29). 이때부터 한참 뒤인 외환위기 발발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용어는 경제부처 장관과 경제인단체 수장이 중심이 되어 매년 상공인대회 축사와 결의문 혹은 경제단체인 면담, 언론 인터뷰 등에 단골 메뉴로 사용되면서 사회적으로 재생산되었다.

이는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용어가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레토릭” 혹은 “덕담”으로 구성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즉, 평상시(휴지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용어는 레토릭(수사학), 덕담, 미사여구, 구두선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싸게 파는 것”과 같이 지극히 보편적인 것이다. 하지만 기업비리나 불상사가 발생하는 비상시(활동기)에 그 의미의 반경은 급속히 확대되면서 사안에 따라 구체화된다. 즉, 임금체불, 감원·해고문제, 가격조작, 불량상품 생산, 공해문제, 세금탈루, 산업재해, 부동산 치부, 밀수 등 그 사안이 무엇이든지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글자그대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악덕기업인으로 낙인이 찍힌다. 특

히 이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포청천과 같이 벌을 주는 심판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들에게 대리만족을 제공한다.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의 심판이 아닌 비시장적 정치기제에 따라 정부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더욱이 군사 쿠데타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민심을 얻기 위해 재벌은 부정축재자로 몰려 처벌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기업은 반성하고 자숙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하고 여론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린다. 이는 다시 또 다른 기업 불상사가 일어날 때까지 반복된다.

한편 이후 CSR의 휴지기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용어가 점차 사회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1965년 6월 28일 경희대에서 '제1회 전국대학생 경영학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총 3가지의 논제 중 첫 번째가 바로 "후진국에 있어서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었다(경향신문 1965.6.9). 또한 기업의 입사시험에도 이 개념이 등장하는데 1965년 10월 중소기업은행 입사 시험문제는 4가지(①법인의 능력을 논함 ②국제개발 협력과 후진국경제 개발을 논함 ③경영자에게 요청 되는 자질과 사회적 책임 ④중소기업 기술향상을 위한 방책) 중 하나를 택일하는 것이었다(매일경제 1966.10.8). 기업들 역시 1965년 11월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의 재인식을 다짐하는 '경제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선포하였다(동아일보 1965.11.6). 언론 지상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본질적으로 영리추구가 기본원리이지만 사회제도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사상이 이 시기에 벌써 소개되고 있었다(매일경제 1966.5.5).

이러한 2년간의 휴지기가 지나고 1966년 9월에 60년대 가장 큰 기업 불상사 중 하나로 기록되는 사카린 밀수사건이 터진다. 이 사건은 삼성그룹의 한국비료주식회사가 사카린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사건이다. 한국비료는 1966년 5월 공장 건설 용도로 받은 정부차관 4000여만

달러로 사카린 원료 약 55톤을 건설자재로 위장해 들여왔다. 한국비료는 이 원료를 다른 회사에 팔려다 부산세관에 적발됐는데 이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벌과금 20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밀수를 '5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해놓고 있던 상황에서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가져왔다. 당시 언론은 “애국 속에 위장된 망국(亡國)” “국민 분노케 한 파렴치” 등과 같은 제목의 기사로 연일 삼성그룹에게 격한 비판을 가하였다(동아일보 1966.9.10; 9.17). 더불어 이 사건은 또 다른 이슈로 연결되어 그 파장이 더 커지게 되는데 이른바 인분투척사건이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한 대정부 질의 중 김두한 의원이 국무위원 및 장관들에게 인분을 투척한 사건으로 이후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구속되었다(동아일보 1969.12.30). 이 사건은 삼성이 이전 삼분폭리사건이라는 설탕 가격조작으로 매서운 사회적 비판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오만함으로 국민들에게 비추어졌다. 결국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병철 회장은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였다(동아일보 1966.9.22).

이후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고 휴지기가 다시 돌아오자 CSR은 다시 레토릭으로 돌아왔고 이 회장은 1968년 2월 다시 일선에 복귀한다. 삼분폭리 사건과 사카린 밀수사건의 공통점은 그 당시 가장 급속히 몸집을 키우고 있던 재벌인 삼성그룹이 그 주인공이었다는 점으로 현대 한국 CSR의 기원이 역설적으로 삼성으로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 국가 자본주의: 계몽적 CSR

(1) 1970년대

1970년대 본격적인 경제성장기에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부는 국가의 산업자본 육성 방침에 따라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기업을 지원하기도 하고 도태시키기도 하였다. 정부가 신용할당권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기업은 정부의 권고사항이나 명령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0년대 들어와서도 매년 상공인대회에서 정부는 CSR을 준수하라고 치사에서 밝히고 기업은 다시 이의 준수를 다짐하는 레토릭으로서 기존의 관행(routine)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에 국가주의적 색채가 혼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CSR에 애국주의와 민족주의가 본격적으로 내재화된 것이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제는 기업의 ‘국가적’ 혹은 ‘민족적’ 책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고 이는 기존의 레토릭으로서의 CSR 개념에 이념적 요소가 추가됨을 의미하였다. 실례로 1970년 9월 9일에 열린 상공인대회에서 4천명의 참가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를 다짐하면서 “나를 위한 기업보다 겨레위한 기업되자”는 슬로건을 들고 “방위 산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한다(동아일보 1970.9.9).

대통령도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하는데 1970년 1월 박대통령은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업계는 기업윤리를 확립, 사회적 책임을 갖고 별다른 이유 없이 물가가 뛰어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다(경향신문 1970.1.28). 대통령의 지시 이후 정부는 CSR을 구체적인 경제정책의 하나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0년 12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목표로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합리화 가이드라인의 4대 원칙을 발표하는데, 이는 지금의

조달 및 운영의 건실화, 경영관리의 과학화, 기술수준의 제고와 혁신,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의 양양 등으로 CSR은 이제 비록 형식적이더라도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개념으로 제도화되었다(동아일보 1970.12.11). 언론 역시 1971년 연초부터 거의 모든 신문의 연두사(年頭辭)에 이 개념이 등장할 만큼 외형적으로도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졌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CSR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소비자가 대상이 아니라 정부에 보여주기 식의 CSR 정책들을 선보이는데 집중하였다. 실례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1971년 2월 자신의 전 재산 150억원을 정리하여 이중 2/3인 100억원을 삼성문화재단에 출연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여론은 냉담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언론플레이로 실제로는 절세와 재산보존이 주된 목적이라는 냉소까지 나왔다(매일경제 1971.2.23). 이러한 회의적 시각은 삼성이 불과 10년도 채 안된 삼분폭리 사건과 사카린밀수 사건의 주역이었다는 배경으로부터 작용하였다. 이는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재벌그룹들이 설립한 공익재단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과 의문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1970년대에는 많은 기업인들이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하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재단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 재단법인은 재산도피처로서의 오명을 낳았다. 이에 따라 1974년 10월 정부는 국세청과 감사원을 동원하여 삼성문화재단에 대한 대규모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이 재단이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산하 계열사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기능하고 있었고 부의 탈세와 변칙상속의 방법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동아일보 1974.10.3). 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에 56개의 재단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많은 재단들은 탈세를 목적으로 한 위장 기업재단이었거나 설립만 해

놓고 제대로 운영도 되지 못하고 휴면상태인 채 남아있는 경우 등 실질적 운용 과정에 큰 파행을 겪었다. 이러한 부정적 모습들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기업재단이란 존재가 국민들로부터 강한 불신과 냉소를 낳는 계기가 되었다(이상민 2012b).

한편 경제단체들 역시 정부에 보여주기 식 CSR에 참여하기 시작하는데 전경련은 “기업 이윤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에 노력하며 사회정화와 정풍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고 30개항의 실천요강까지 발표하였다(경향신문 1971.7.16).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도 전국의원대회를 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과 국민경제 발전에의 기여, 책임경영의 기풍 조성과 신용사회 건설, 근면 검소한 생활기풍과 존경받는 기업인상 확립” 등을 결의한다(동아일보 1971.10.19). 이러한 기업들의 보여주기 식 분위기 속에서 1972년 4월에는 국내 최초로 한독약품이 주요 일간지들 1면 하단에 “기업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라는 단일 카피만 사용한 기업홍보용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고(경향신문 1972.4.20), 전경련은 그해 12월에 재계 차원에서 최초로 사회복지시설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현재 시점에서는 익숙한 자선활동에 나서면서 사회적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매일경제 1972.12.28).

CSR은 이후 정치적 체제와 이념들과 결합하여 국가주의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게 된다.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한 달 뒤인 1972년 1월초에는 CSR이 대통령의 신년사에까지 공식적으로 등장한다. 박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공무원의 봉사자로서의 자세, 정치인의 무절제·비능률의 탈피,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각각 강조하면서 사회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경향신문 1972.1.6). 이러한 대통령의 시각은 흥미롭게도 CSR이 이후 새마을운동과 직접적으로 결합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한국노총은 새

마을운동실천대회를 열고 “총화(總和)의 정신혁명”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여부를 감시하겠다고 선언한다(경향신문 1972.5.12). 한편 1972년 8월 3일 정부는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 즉 ‘8.3사채동결긴급조치’를 선포하였다. 이 조치로 사채를 쓰고 있던 당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막대한 경제적 특혜를 받게 되었는데 이 조치에 따라 동결된 사채총액은 3,456억 원으로 이는 1971년 말 총 통화의 31.9%와 국내신용의 30.1%에 상당하는 규모였다(경제기획원 1982).

새마을운동과 8.3조치 그리고 CSR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생산하면서 서로 엮이게 된다. 즉 8.3조치로 기업은 사채 압박으로 인한 경영애로가 제거되었고 정부의 과감한 금융 지원으로 사실상의 특혜를 입게 되었으니 정부에 보은하는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사실상 성금을 내라는 의미) 하라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직접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은 기업인이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새마을 정신을 함양하는데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제 기업인의 새로운 사명은 새마을운동으로 바뀌었고(경향신문 1972.8.14), 이후에는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사회가 기업인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의 으뜸이라고 주장하는 신문사설까지 나오게 된다(매일경제 1976.6.7).

이러한 국가주의적 CSR은 1972년 10월 유신 선포 이후 더욱 강화되어 기업은 “경제유신의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데(매일경제 1972.11.9), 이 역할 수행에서 일탈할 경우 국가는 직접 이들을 ‘반사회적 기업인’으로 낙인을 찍어 처벌하였다. 실례로 1973년 4월 6일 정부는 ‘반사회적 기업인’ 73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일체의 금융지원을 중지하였다. 여기서 반사회적 기업인이란 기업법인 재산을 개인재산으로 빼돌리고 부실화된 기업은 은행에 떠맡기는 등 재산은

닉, 대출유용, 탈세수법을 써온 기업인을 지칭하였는데,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한 ‘악덕기업인들’로 간주되었다(동아일보 1973.4.6). 한걸음 더 나아가 박대통령은 이러한 반사회적 기업인을 ‘반민족적 기업인’으로 낙인찍은 뒤, “기업이라는 사회적 공기를 위임받은 경제인은 모름지기 검소와 근면으로서 사리보다는 공익을 앞세우고 개인적 권익보다는 사회적인 책임을 더 존중하는 봉사자로서의 겸손과 지도계층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매일경제 1973.4.17).

이는 결국 조국의 근대화에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이 마당에 기업인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강한 암묵적 규범으로 사회 전반에 전파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 내내 기업인의 탈세, 외화은닉·도피, 위장이민, 도덕적 탈선 등 비리가 밝혀지면 이 암묵적 규범을 깨트린 대가로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회적 파장이 컸던 것은 1979년 울산그룹의 도산사건으로 신선호 회장이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횡령죄로 구속되면서 70년대 마지막을 장식한 대표적인 반사회적 기업인으로 질타를 받았다(경향신문 1979.4.4). 박대통령은 사망 한 달 전까지도 “기업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투철히 인식하여 종업원을 가족같이 대하고 근로자는 공장을 내 집같이 아끼는 노사일체감 조성에 서로 노력하여 공존공영 하는 한국적 노사협조 체제를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여전히 “이를 위해 공장새마을 운동을 더욱 활발히 내실 있게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동아일보 1979.9.14.).

(2) 1980년대

1979년 10월 박대통령 사후 등장한 신군부세력은 또 다른 버전의 국가주의 CSR을 선보인다. 경제계는 과거 5.16 직후의 부정축재자 축

출을 경험했기 때문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1980년 새해가 밝자 전경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짐하는 기업인헌장을 제정, 선포하겠다고 밝힌다(매일경제 1980.2.28). 이에 계엄당국은 ‘사회정화와 정의사회 구현’을 강조하며 김종필과 같은 정치인들은 구속하였지만 기업인들은 예외적으로 제외시키면서 “당국은 이번 부조리척결을 계기로 기업인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인식, 자발적인 노력으로 산업보국을 위해 일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발표한다(경향신문 1980.6.18).

이에 정부에 보여주기 식 CSR은 여전히 반복되었다. 전경련, 상, 무역협회, 중소기업협회 등 경제4단체는 기업풍토 쇄신 대회를 열고 자신들의 과거를 참회하고 반성하는 기업인 윤리강령 선언을 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자신들이 그동안 지나친 기업집중, 중복투자나 불공정 거래 등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낭비를 몰아왔다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정의사회 구현에 매진할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경향신문 1980.7.16).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의 기업이며 기업인의 투철한 사회적 책임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하고 자신의 집을 제외한 사재 2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동아일보 1980.8.29).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역시 기업이 나아갈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확대라는 기본목표와 더불어 인류의 복지와 문화향상의 근원지로서의 터전이 되는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소유재산 모두를 사회사업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매일경제 1981.9.14).

이 시기 신군부와 재벌 기업인들에게 CSR이란 이런 것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기업인은 사회적 책임을 깊이 자각하여 기업보국의 신념으로 부조리 추방과 건전한 기업윤리 확립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는데(동아일보 1983.7.5), 이는 기업비리를 사회 안정을

해치는 악으로 추방해야 되는 것이고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정(司正)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미였다. 이는 이후 CSR이 기업풍토의 쇄신이라는 명목으로 사정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례로 당시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던 사정협의회는 1984년 1월 정관용 대통령사정수석비서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새해의 목표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선진 기업가상을 선양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동아일보 1984.1.23).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경제단체들과 재벌그룹 회장들이 매년 기업윤리 확립 결의대회를 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다짐하는데 이 자리에 당시 사회정화위원장이 반드시 참석한다는 점이다(매일경제 1984.11.22).

1980년대 들어와 일반 재벌기업들의 재단 설립이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확립된 것이 아니라 주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정권적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재단 설립이 자발적이기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참여하는 경향이 컸다. 동시에 1980년대는 국내 기업들의 절대적 규모가 커지고 동시에 창업 1세대들이 2세대로 바뀌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기업경영의 이양기 과정에서 재단은 기업인들의 변칙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듯 반(反)기업정서와 같은 사회적인 비판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에서 당시 새롭게 집권한 전두환 정부는 재벌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기업재단에 대한 세무조사의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특히 신정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의 비난 여론을 해소하는데 있어 대기업 때리기를 고도의 정치행위로 사용하였다(이상민 2012b). 실례로 정부는 1984년 상속세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기업들의 재단을 통한 탈세를 용납하지 않겠다

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 그해 6월 정부는 재벌과 고소득층들이 상속세법이 정한 공익사업에 대한 면세규정을 악용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출연하면서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상속세율은 7%에서 60%까지 15단계로 법체계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문화재단을 만든 재벌기업과 만들지 않은 기업들 간의 상속세액에 큰 차이를 보여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유행하였기 때문이다(경향신문 1984.6.19).

한편 1987년 6.10 민주항쟁 이후 CSR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이전 시기까지 한국 재벌기업들에게 CSR의 핵심적 이해당사자는 사실상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정부였다. 기업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존재는 국민이 아니라 정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6.29선언 이후 산업계 전반에도 민주화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노사관계 문제가 CSR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이는 CSR이 과거 단순히 정부-기업관계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안정 역시 정부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특히 당시 빈번했던 노사분규 과정에서 가장 큰 사안이었던 저임금 해소와 인간적인 처우 등과 같은 근로조건 개선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이 빈번히 사용되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회복을 위해 저임금을 일소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다수 언론도 책임 있는 경영인들이 나서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절감하는 것 혹은 “멋진 기업 오너”라는 식의 논조를 띄었고(동아일보 1987.8.1; 경향신문 1987.8.14; 매일경제 1987.8.17), 정부 역시 침묵하는 노동자들의 욕구를 대폭 수용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경향신문 1987.9.19).

(3) 1990년대

이후 ①기업 불상사가 발생하면 CSR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②이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대한 기업들의 자숙과 반성이 공표되고 ③사회적 책임의 준수라는 차원에서 해결책 제시와 덧붙이는 굳은 다짐과 맹세의 발표 ④마지막으로 곧 잠잠해지는 여론과 CSR 휴지기의 도래 등과 같은 오래된 CSR의 쳇바퀴 관행은 지속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기업 불상사는 1989년 11월의 삼양라면 우지 파동과 1991년 3월 두산전자의 폐놀 유출 사태였다. 특히 폐놀 유출 사태는 사회적 반향이 매우 컸는데 한 신문사는 사설에서 “기업할 자격이 없는 기업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까지 주장하였는데 그 결과 박용곤 두산그룹 회장이 사임하였다(동아일보 1991.4.23).

폐놀 유출 사건은 일반 국민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단순히 레토릭으로서의 선언적 과제가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기업들도 사회경제 민주화 분위기에 맞추어 점차 소득분배의 격차와 부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고 노사대립, 환경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CSR에 대한 실질적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재단 설립도 1990년대는 60개로 이전 1980년대의 30개와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이상민 2012b).

이렇듯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조된 가운데 1991년 11월 경실련 산하의 경제정의연구소가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기업들도 1993년 7월 포항제철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

내 기업 최초로 윤리강령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당시 포항제철이 의도한 사회적 책임이란 기존의 오랜 기간 실력자였던 박태준 전임 회장의 색채를 지우고 정치에 불개입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매일경제 1993.7.22). 이듬해 럭키금성그룹이 사회적 책임과 공정경쟁을 다짐하면서 민간 기업 최초로 기업윤리규범을 선포하였다(매일경제 1994.2.18). 또한 1994년 2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부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기업과 문화 예술계의 공존을 목표로 기업메세나협의회가 2백6개 기업의 참여로 처음으로 발족했다(동아일보 1994.4.21).

이후 CSR의 휴지기는 오래가지 못한다. 1994년 11월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1995년 6월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예외 없이 다시 사회적 비난과 CSR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켰다. 성수대교 사건의 경우 해당 기업 총수인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반성하고 사회에 보상한다면서 다리를 다시 시공해서 헌납하겠다고 선언하였다(경향신문 1994.11.11). 곧이어 1995년 11월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폭로되어 오랜 관행이었던 정치자금 조성과 정경유착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기업들은 역시나 재빠른 보여주기 식 반성 국면으로 전환을 시도하였는데, 현대그룹이 가장 먼저 기업윤리강령을 선포하였고 뒤이어 1996년 2월 전경련이 일본 경단련의 기업행동헌장을 그대로 베낀 기업윤리헌장을 공표하였다(경향신문 1995.12.12; 동아일보 1996.2.8). 또한 1996년 7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처음으로 CSR을 다룬 '21세기 초일류경영 동양정신서 나온다'라는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매일경제 1996.7.14).

한편 1990년대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 기조에 따라 자본의 해외 차입이 자유화되면서 재벌기업의 규모 역시 급속히 커지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1990년대 초반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정치 참여 시도와 같이 사회 전반의 민주화 흐름에 편승하기도 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세계화와 개방화 추세에 편승하여 점차 자신들의 목소리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기 시작하였다. CSR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부담감을 가졌던 재벌기업들은 이 기회에 반격에 나서게 된다.

가장 먼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996년 8월에 “기업에 사회공헌을 강요하는 것은 준조세와 같다”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들은 기업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아주 좁은 의미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넓은 의미로 확대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나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강조는 기업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들은 구체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주주의 이익, 기업 구성원의 이익, 소비자 만족, 영업 관련 기관에 대한 공정한 행동, 공해유발이나 안전사고 방지 등 경영 환경의 다섯 가지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경향신문 1996.8.3). 이후 전경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기업의 이윤 추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대신 이를 바로잡을 재벌 측의 논리를 담은 경제교과서를 출간하겠다고 발표하였다(동아일보 1997.12.12). 하지만 이러한 재벌들의 논리는 곧 이어 불어 닥친 외환위기 여파에 묻히게 된다.

5) 세계화: CSR에서 CSV로

(1) 외환위기 직후

1997년 말 발발한 외환위기는 많은 수의 기업들을 도산시켰고 이와중에서 기업의 소유주 또한 상당수가 바뀌었다. 실례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2년 동안에 1997년 4월 기준 30대 기업집단 중에서 절반

에 가까운 14개가 도산, 법정관리, 화의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작업(workout)의 대상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기업 소유주가 바뀌었다. 따라서 기업경영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의 CSR 사업도 예산삭감 및 기구축소의 일차대상이 되었다. 실례로 이 시기 전경련에 의해 조사된 147개 기업의 1998년도 사회공헌활동 총지출액은 3,327억 1,000만원이고, 기업 당 평균 집행 액은 22억 6,300만원이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도 조사에 응한 92개 기업의 기업 당 평균 집행 액 33억 3,400만원에 비해 32.1%나 감소한 것이다(전경련 2000).

외환위기는 현대 한국 CSR에 있어서도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특혜나 부패, 정경유착, 투기, 탈세, 그리고 부실경영과 같은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비등하게 되고 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재벌의 방만한 경영이 지적되면서 사회 전반에 전면적인 재벌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시절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즉 구조조정 문제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최고의 CSR을 실천하는 기업은 해고나 감원을 안 함으로써 사회적 고통을 분담해주는 기업들이었다. 현재 한국 CSR의 대표적 기업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유한킴벌리가 이 시절부터 말로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운운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으로 무해고 정책을 보여준 사례이다(한겨레 1998.4.24). 같은 논리로 신입사원 채용을 늘리는 기업 역시 가장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어려울 때일수록 우수인재 확보에 힘써야하며 우수자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였다(동아일보 1998.12.1: 경향신문 1998.12.2).

실제로 이 시기 재벌 기업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워낙 거세어 한 경

제신문사는 ‘기업사랑 나라사랑’ 캠페인까지 벌이며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호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매일경제 1999.2.4).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재벌개혁에 나서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그 대의명분으로 내세웠고, 산업 구조조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기업이 가장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으로 간주하였다. 실제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구조조정과 빅딜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삼성의 이근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처리 과정에 협조하고 사재를 출연한 사례를 들어 칭찬한 반면, 김우중 회장에게는 대우의 책임자로서 국민이 기대하는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진정한 기업인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며 압박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99.8.26).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은 이전과 다름없는 보여주기 식 CSR이었다. 삼성은 최초로 사회공헌활동 백서를 발간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체계적 기록 관리를 통해 21세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고(연합뉴스 1999.4.21), 신세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윤리경영을 선포하였다(매일경제 1999.12.23.). 이후 2003년 2월 당시 전경련 손길승 회장은 새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지도해 달라”고 부탁하여 바짝 엎드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오마이뉴스 2003.2.12).

(2) 현재

외환위기 초기의 경우 재벌 기업들의 대응책은 이전과 유사한 반성의 레토릭 위주였지만 위기 극복 이후부터는 점차 색다른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는 CSR의 국제표준화 추세로 국제기구들은 당시 기업들

에게 공통된 국제규범으로서 사회적 책임 수행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해외시장 매출 비중이 매우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 이러한 국제적 추세는 강한 외부압력으로 작용하여 생존을 위해서는 싫든 좋든 간에 CSR을 수행하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이러한 CSR의 국제 표준화 작업은 사실상 CSR의 미국화를 의미하였다. 이는 CSR을 국가나 이해관계자 차원이 아닌 개별 기업 차원의 정책으로 축소하여 간주하며 마케팅과 홍보가 결합한 구체적인 경영전략을 통해 구현된다. 따라서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공동체 참여 및 개발 등과 같은 광범위한 CSR의 의제들은 유럽과 달리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 개별 기업 CEO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이상민 2012a).

당시 미국에 생산기지를 확대하던 재벌 기업들은 현지에서 이러한 미국식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에 눈을 뜨게 된다. 이는 과거 재벌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문제를 단순히 레토릭으로 반성하고 방어해야만 하였던 수동적 차원에서 이제는 기업 가치의 제고, 즉 이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경영전략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미국식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도 사회 전반에 CSR 논의가 붐몰을 이루면서 2003년을 ‘CSR 경영 원년’으로 부르고 있었다(Kawamura 2005). 일본의 경단련은 기업 사회공헌(corporate philanthropy)이라는 개념을 영문 그대로 ‘기업 자선활동’으로 번역하지 않고 ‘사회에 공헌’(social contribution)한다는 개념으로 바꿔 부른 것이 국내에도 그대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일본발 추세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이 당시 가장 일본화된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던 삼성그룹이었다.

삼성엔 이미 1994년 국내 최초로 CSR 전담 조직으로 사회봉사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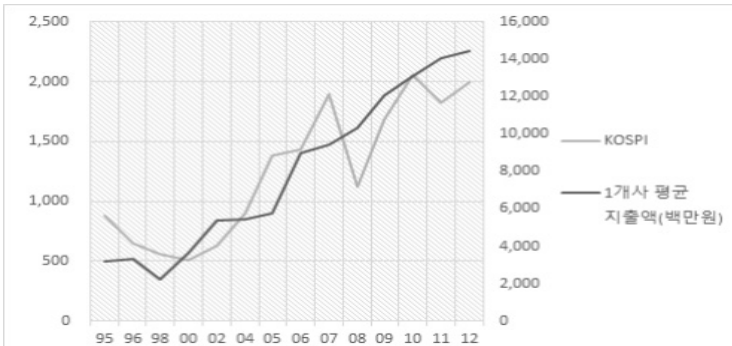
발족시켰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중심으로 CSR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와 이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 전파에 나섰다. 하지만 SERI의 논리 개발과 전파 과정에서 광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이 사회공헌활동과 윤리경영이라는 두 가지만으로 대폭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후 전경련 산하에 사회공헌위원회와 윤리경영위원회가 설치되고 다른 재벌 기업들 역시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기업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실질적으로 사회공헌과 윤리경영 두 가지만을 의미한다. 결국 한국의 기업 생태계에서 이제 CSR이란 기업 내부에서는 윤리경영 실천으로, 기업 외부로는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정리된다.

이 결과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애당초 경제, 사회, 노동, 인권, 환경 등의 다양한 주제로 확산되고 있었던 사회적 책임 논란의 부담을 덜게 된다. 즉 이제는 기업들이 윤리경영현장을 제정하고, 기부금 예산을 늘리고,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스스로 내재화 해버리게 된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적 책임을 마케팅 전략으로 접근하는 미국식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이 진화하여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개념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가치인 기업의 수익 창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사회의 발전을 함께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Porter and Kramer 2011), 대표적인 외국 사례가 토요타의 프리우스와 같은 환경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이다. 국내에서도 CJ그룹이 관련 조직 명칭을 CSV경영실과 CSV기획단으로 바꾸었고 SK텔레콤은 CSV와 창조경제 업무를 통합한 'CEI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조선일보 2016.3.29).

한편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CSR의 외형적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

지면서 기업들의 CSR 예산도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이는 CSR의 국제 표준화 작업, 외국인 직접투자액 증가, 국내 우량기업들의 해외진출 가속화 등과 같은 외부압력 요소들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반(反)기업정서의 증가와 같은 내부압력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CSR 비용을 줄이고 싶어도 못줄이게 되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내 기업들이 CSR 활동에 지출한 연 총액이 매년 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세전이익 대비 지출은 3.76%로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 기업들을 능가하는 수준이다(전경련 2014). 실례로 아래 <그림 1>은 1995년부터 2012년까지 17년 간 한국의 종합주가지수와 1개사 평균 CSR 지출액의 추이를 분석, 가공하여 그래프로 변환한 것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8년 전후의 글로벌 경제위기 시기가 포함되어 있어 경제위기, 즉 불황 때 한국 기업들의 CSR 비용 지출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실증적 해답을 제공해준다. 흥미로운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호황이나 불황 같은 경기와 상관없이 한국 기업들의 CSR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 한국의 종합주가지수(KOSPI)와 1개사 평균 CSR 지출액 추이(1995~2012)



자료: KRX(2012); 전경련(2012).

3. 결론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역사는 대단히 짧다. 단기간 내에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근대적 형태의 기업경영 경험이 일천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이 정형화된 기업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부와 자본의 축적에 대한 종교적 용인과 뒷받침이 세속적 경제활동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발현하여 진화해 오는 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뿌리와 역사로 돌아가 고려와 조선시대의 상인계급들로부터 현대의 재벌 기업인들의 정신에 과연 CSR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의 개항기에 이르기까지 상인계급들에게 공유되고 지켜지던 CSR의 정신과 윤리가 분명히 존재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제에 의한 민족자본 말살정책에 따라 애국애족의 사업보국이라는 사회적 책임의 정신으로 무장한 민족기업인들이 몰락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사회적 책임은 커녕 자본가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조차 부재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후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와 부흥기간 동안 형성된 한국의 초기 자본주의 정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CSR은 철저히 방관으로 일관되었고 이는 재계 서열 1위인 재벌기업마저 밀수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듯 이 시기 자본주의적 질서와 윤리의 부재는 그 반작용으로 사회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항시적 수요를 창출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CSR에 국가 개입을 정당화시켰다. CSR은 이후

국가 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CSR은 유신, 새마을운동, 사회정화 등과 같은 국가의 이념적 캠페인과 맞물려 국가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배태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1960, 70년대에도 여전히 언론지면을 빈번하게 장식하던 일상적인 개념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이 개념이 최근에 와서 갑자기 부각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개념이 마치 얼마 안 된 최신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비유하고 싶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 개념이 오랜 기간 매번 레토릭으로 사용되다보니 이를 이야기하는 측이나 듣는 측 모두에게 무게감이 없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쉽게 잊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추세는 CSR의 미국화이다. 이는 기존의 사업보국과 같은 관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CSV를 통한 가치증대와 같이 실질적 이윤추구를 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큰 차이점을 보인다. 이는 과거와 달리 민간 기업부문이 급성장하면서 정부에 대한 시장의 우위 추세 속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국에서 CSR 개념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자기 조절적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만 작동하는 형식적 의미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자체가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경영전략에 의해 경쟁적으로 생산되어 거래되고 교환되는 허구적 상품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미지 쇄신과 궁극적인 매출 증대를 꾀하고 있고, 일부 재벌그룹의 총수들은 자신들의 실정법 위반에 대한 면죄부

로 재산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면서 정치적 교환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CSR이 벌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CSR 개념은 쳃바퀴처럼 반복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이다. 즉 사회로부터의 기업 비판에 대한 반성의 징표, 표지(mark)로서 행하는 수동적 대응 행위이다. 여기에 정부는 분노한 국민정서에 기대어 세무조사나 법적 처벌 등과 같은 수단으로 오랜 기간 CSR을 재벌에 대한 통제기제로 사용하여 왔다. CSR의 쳃바퀴는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① 기업 불상사가 발생하면 CSR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② 이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빚는데 대한 기업들의 자숙과 반성이 공표되고 ③ 사회적 책임의 준수라는 차원에서 재산의 사회환원과 같은 해결책 제시와 덧붙이는 굳은 다짐과 맹세의 발표 ④ 마지막으로 이에 곧 잠잠해지는 여론 그리고 뒤이어 CSR 휴지기가 도래한다. 이러한 쳃바퀴는 과거와 달리 전략적 사회공헌과 같은 적극적 대응으로 기업 가치 증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최근에도 여전히 적용된다. 실례로 땅콩회항이나 재벌 총수의 개인비리 사건 등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과거와 다른 점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의 소비자들과 NGO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현대 한국의 CSR은 정부-기업관계 차원의 문제로부터 기업-소비자 관계의 문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어찌 보면 CSR 문제가 이제야 당연한 논의의 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애시 당초 이 문제에 대리인인 국가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예외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의 구조적, 기술적 한계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전(前)자본주의 시기의 역사적 사실들

을 근거로 한국 CSR의 역사를 분석한 시도가 애초 CSR은 자본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과 어떻게 양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조적 문제이다. 다만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CSR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전(前)자본주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역사적 원천을 통합적으로 밝히고자하는 데 있고 이 부분에서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분석에 있어 많은 부분이 신문기사에 의존하고 있어 신문기사가 학술적인 연구의 원천으로 사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저널리스틱’한 기사와 ‘아카데믹’한 논문 사이에서 부딪치는 기술적 문제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국 CSR의 역사에 대한 ‘아카데믹’한 연구가 전무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신문기사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 추가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학술적,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는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2016년 3월 31일 접수, 4월 26일 심사완료, 5월 11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만길. 1973. 『한국 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경방. 2012. 경방유희영회. <http://www.kyungbang.co.kr/>
- 경제기획원. 1982. 『개발년대의 경제정책: 경제기획원 20년사』.
- 경향신문. “外資導入 適格者 選定과 韓國 企業人精神의 低調.” 1962.1.25.
- 경향신문. “企業人들은 자기 姿勢를 自省하라.” 1964.2.18.
- 경향신문. “學生經營學 세미나.” 1965.6.09.
- 경향신문. “朴대통령 지시 企業倫理 확립토록.” 1970.1.28.
- 경향신문. “經濟界서 淨化운동 앞장 全經聯, 30개項 실천요강 마련.” 1971.7.16.
- 경향신문. “기업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한독약품 1면 광고. 1972.4.20.
- 경향신문. “倫理化된 精神生活로 人間關係의 幅을 넓히자.” 1972.1.6.
- 경향신문. “勞總서 새마을運動실천대회 總和의 精神혁명을.” 1972.5.12.
- 경향신문. “8.3契機…朴大統領 새使命 촉구 企業의 새마을運動.” 1972.8.14.
- 경향신문. “3년 만에 幕내린 栗山 財閥劇.” 1979.4.4.
- 경향신문. 1980.6.18. “權力の 蓄財道具化에 철퇴 戒嚴司 權力型 不正 斷罪.” 1980.6.18.
- 경향신문. “企業人 倫理綱領의 宣言.” 1980.7.16.
- 경향신문. “文化財團 위장 財閥脫稅 막는다.” 1984.6.19.
- 경향신문. “責任있는 經營人들이 나서라.” 1987.8.14.
- 경향신문. “沈默 근로자 欲求 대폭 수용.” 1987.9.19.
- 경향신문. “企業人の 司法처리 문제.” 1994.11.11.
- 경향신문. “현대 기업윤리 강령 선포.” 1995.12.12.
- 경향신문. “외국선 ‘정직과 신뢰’ 각국 기업윤리강령 비교 국내선 ‘사회적 책임.’” 1996.8.3.
- 경향신문. “반가운 신입사원 채용.” 1998.12.2.
- 고려도경(高麗圖經). 권3. 고려사 권77. 白官2 京市暑條.
- 고려도경(高麗圖經). 권3. 坊市, 고려사 권77.

- 고승희. 2005. “개성상인의 경영사상과 송도치부법의 논리구조.” 『경영사학』. 36(0). 91-183.
- 김병하. 1994. 『한국경영이념사』. 서울: 계명대학교출판부.
- 김병하·황명수·김성수·신두휴·황완성·이광주·고승희. 1992. 『한국의 시장상업사』. 서울: 신세계백화점출판부.
- 김성수. 1985. 『일제하 한국경제사론』. 서울: 경진사.
- 김성수. 2002. “개성상인정신 발달사: 개성상인정신 연구.” 『경영사학』. 17(29). 19-57.
- 김재호. 2014. “경제학자가 본 한국사: (27) 새로운 영리기회의 출현과 회사 설립.” 『한국경제신문』. 2014.9.22.
- 동아일보. “京電 爭議 再燃.” 1925.2.13.
- 동아일보. “형편 딱한 배움의 길: 청소년과 장학회.” 1957.4.1.
- 동아일보. “獨占商品의 價格調整 朴商工長官 言明.” 1964.6.29.
- 동아일보. “三星財閥의 總帥 李秉喆씨 文化財團 設立의 안팎.” 1965.2.6.
- 동아일보. “『經濟倫理綱領』·『倫理實踐要綱』·『倫理委員會』 회칙 전문” 1965.11.06.
- 동아일보. “愛國 속에 僞裝된 亡國.” 1966.9.10.
- 동아일보. “국민 憤怒케한 破廉恥.” 1966.9.17.
- 동아일보. “모든事業서 손 떼고 韓肥 國家에 바칠 터.” 1966.9.22.
- 동아일보. “內閣이 부끄러워 辭表낸 汚物洗禮.” 1969.12.30.
- 동아일보. “商工人大會 四千명모여 防衛産業 적극참여.” 1970.9.9.
- 동아일보. “民間企業 육성 4原則 마련.” 1970.12.11.
- 동아일보. “三星文化財團 稅務조사.” 1974.10.3.
- 동아일보. “섬유對策·産業再編을 商議, 全國의원大會서 건의.” 1971.10.19.
- 동아일보. “反社會的 企業人 강력 制裁.” 1973.4.6.
- 동아일보. “勞使와 宗教 法 테두리서.” 1979.9.14.
- 동아일보. “大宇그룹 金宇中 회장 私財 200億 社會환원.” 1980.8.29.
- 동아일보. “全大統領, 司正協 지시 안정 害치는 非理 과감히 추방.” 1983.7.05.

- 동아일보. “**司正** 회의 뇌물주는 **企業人** 구속搜查.” 1984.1.23.
- 동아일보. “**勞使** 분쟁 자율 해결 기업 **低賃** 해소 촉구.” 1987.8.1.
- 동아일보. “**斗山電子** 문 닫아야한다.” 1991.4.23.
- 동아일보. “**企業** 메세나는 시대적 요청.” 1994.4.21.
- 동아일보. “전경련 기업윤리현장 내용 확정.” 1996.2.8.
- 동아일보. “재벌논리 담은 경제교과서 나온다.” 1997.12.12.
- 동아일보. “LG 신입사원 1천명 月內 채용.” 1998.12.1.
- 동아일보. “**金대통령** 재벌개혁은 **船團式** 경영 종식.” 1999.8.26.
- 매일경제. “**就職 受験** 가이드 **大學 卒業生**을 위한 (16) **中小企業銀行**.”
1966.10.08.
- 매일경제. “**企業**의 **經營理念**.” 1966.5.5.
- 매일경제. “**企業家**와 **財閥**.” 1971.2.23.
- 매일경제. “**企業人**과 **福祉**시설의 **結緣**.” 1972.12.28.
- 매일경제. “새마을運動과 **企業行動**.” 1976.6.7.
- 매일경제. “**經濟維新**의 **役軍** 되라.” 1972.11.9.
- 매일경제. “**朴大統領** 참석 **經濟**발전 **先導役** 다짐.” 1973.4.17.
- 매일경제. “**全經聯** 주축 **企業人憲章** 制定키로.” 1980.2.28.
- 매일경제. “**鄭周永** 現代그룹 회장 **所有財產** 모두 **社會事業**에.” 1981.9.14.
- 매일경제. “**企業倫理** 확립 **決議大會** 健全 **風土造成** 다짐.” 1984.11.22.
- 매일경제. “멋진 **企業** 오너 등장 아쉽다.” 1987.8.17.
- 매일경제. “**浦鐵** 윤리강령 선포.” 1993.7.22.
- 매일경제. “**럭키금성** 기업윤리규범 선포.” 1994.2.18.
- 매일경제. “삼성경제研 보고서 21세기 초일류경영 **東洋**정신서 나온다.”
1996.7.14.
- 매일경제. “기업사랑 나라사랑 캠페인에 부처-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 나겠다.”
1999.2.4.
- 매일경제. “신세계, 신CI선포식.” 1999.12.23.
- 민윤. 2007. “**開港期 仁川 租界地 社會**의 **研究**.” 『인천학연구』. 7. 169-210.

- 삼양사. 2012. 양영재단. <http://www.samyangcorp.com/>
- 양상현. 2002. “개성 상인 정신의 발달사.” 태평양장학문화재단.
- 연합뉴스. “삼성, 사회공헌활동 백서 발간.” 1999.4.21.
- 오마이뉴스. “손길승 회장, 기업 사회적 책임 다하도록 지도해 달라” 2003.2.12.
- 이상민. 2012a. “동아시아 CSR의 사회적 구성.” 『한국사회학』. 46(5). 139-174.
- 이상민. 2012b. “한국 공익재단의 사회적 구성: 역사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0(2). 191-219.
- 이훈섭. 1992. 『한국전통경영사연구』. 서울: 보경문화사.
- 임외석. 2014. “한·중일 주요 상인조직의 경영철학에 대한 비교연구.” 『유라시아연구』. 11(3). 21-44.
- 전경련. 2000. 『2000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경련. 2012. 『2012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활동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경련. 2014. 『2014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활동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
- 정승모. 2006. 『한국의 전통사회: 시장』.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조병찬. 1992. 『한국시장경제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 조선일보. “30대 기업에 사회공헌 전략을 묻다.” 2016.3.29
- 최상문·김확열. 2008. “송상과 진상의 상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민족문화』. 32. 289-34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73433
(검색일: 2016.1.15).
- 한겨레. “우리 회사는 감원 없어요.” 1998.4.24.
- 한만호. 2004. “디지털경제시대에 있어서 개성상인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 『경영건설팅연구』. 4(6). 25-46.
- 황선민. 1994. 『부보상 연구』. 서울: 보경문화사.
- 홍하상(2004), 개성상인, 서울: 국일출판사.
- Kawamura. M. 2005. “The Evolu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Japan(2)-How CSR Swells Have Impacted Corporate Values.” NLI Research Institute.

KRX. 2012. 『소유자별 주식소유분포』. 한국거래소.

Polanyi, K. 1957(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Beacon Press.

Porter, M. E. and Mark R. Kramer. 2011.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 nos. 1-2 (January - February).

Abstract

The Histor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Korea

Lee, Sang Min

Toda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s increasingly emerging as an issue that demands a response both from business and academic communities. In this study, I seek to explain the history of CSR in Korea.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CSR is defined in Korea, both in terms of its conceptualization and the guiding rationale and factors that influence its formation. This study utilized sociological perspectives in order to explain the nature and the history of CSR in Korea in terms of rhetoric. Periodical study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CSR in Korea reveals that the form and function of its CSR institutional arrangements may differ in terms of how businesses adopt and respond to them: before the 2000s, companies remained in a stage of a state-oriented CSR for the sake of legitimacy, while after the economic crisis, companies have tried to implement strategic CSR as a means of gaining profit (based on the logic of commodity).

Keyword : Kore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history, merchant, chaebol